

세월호 유가족들, 특별법 제정 위해 거리로 나섰다

8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4.06.07 14:57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유가족, 시민들에 천만서명운동 동참 호소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서울역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3일째가 되는 날이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실종자들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유가족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회의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7일 서울 도심 10여 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10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이 큰 힘이 됩니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서명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역에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호 소문'을 나눠주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하고,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며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침몰 후 최초 3일 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해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가족들은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 정보 공개도 이뤄져야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 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진상조사 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해 관련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 절차가 진행돼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유가족들은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가족 대책위원회 요구에 동의하는 이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세월호 참사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